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중국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대응 정책

KIEP 북경사무소(kucho@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중국 저출산·고령화 현황
2. 중국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3.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4.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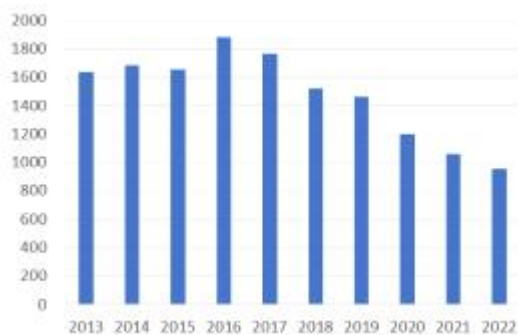
- 중국의 총인구는 2022년 말 기준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대비 85만 명 감소함.
 - 이는 대약진운동 직후인 1961년 이후 61년 만에 처음 겪는 인구감소로 최근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주요 원인임.
 -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대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줄곧 산아제한정책을 펼치던 인구정책도 이 시기부터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기 시작함.
- 중국의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서구 선진국이 경험한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젊은 층이 결혼 및 출산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
 - 중국이 고령사회 진입까지 소요된 21년은 프랑스(126년), 영국(46년), 독일(40년)에 비해 매우 짧으며, 일본(24년), 한국(18년)과 비슷한 수준임.
 - 1인당 GDP의 6.9배에 달하는 높은 양육비와 출산휴가 부족 등 열악한 양육환경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차이리(彩礼, 일종의 결혼 지참금), 부동산 등 혼인 비용 부담으로 인한 혼인 건수의 감소와 학력 상승으로 인한 만혼 추세도 출산율 감소를 부추기는 요인임.
- 중국의 인구 문제는 향후 중국경제의 공급 및 수요 측면 모두에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공급 측면에서 중국은 노동력 감소에 대해 자본집약도의 향상으로 대응하겠지만, 그럼에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려워져 경제성장률 하락이 예상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전체 소비는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이나 실버의료 등 일부 산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을 늘리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도시화 추진, 퇴직연령 연장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인구 문제에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 일부 문제를 극복 가능할 것이라 판단함.
 - 리커창 전 총리는 재임 당시 인구감소에 대해 “중국의 인구보너스는 사라지고 있지만 인재보너스는 커지고 있다”라는 발언하며 질적 향상에 자신감을 보인 바 있음.
 - 전문가들 역시 중국이 여전히 인구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기존 선진국의 인구문제 대응책을 참고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1. 중국 저출산·고령화 현황

■ 2023년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 인구가 2021년 말 14억 1,260만 명에서 2022년 말 14억 1,175만 명으로 85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함.

- 중국의 인구감소는 '대약진운동' 직후였던 1961년 이후 61년 만임.
- 2022년 출생아 수는 956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 이하를 기록하였으며 점차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1 참조).
- 이는 6년 연속 감소한 수치이며 2016년에 비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하였음.
- 중국의 인구감소는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주요 원인이며, 인구 증가율도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음(그림 2 참조).

그림 1. 중국의 출생아 수 추이
(2013~2022년)



주: 단위 만 명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 중국의 인구 관련 지표 추이
(2012~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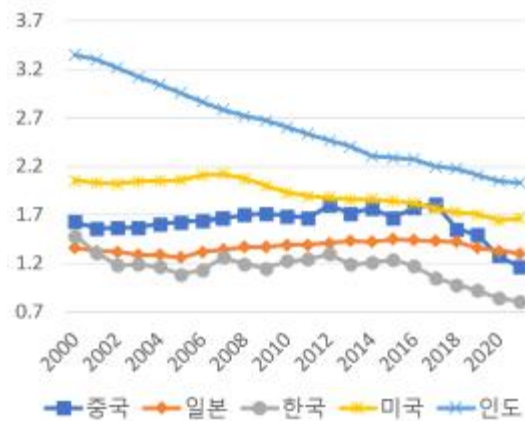
주: 막대그래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을 나타냄. 파란선은 조출생률로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를 당해연도의 총인구로 나눈 후 1,000을 곱한 값을 의미함. 빨간선은 인구 자연증가율로 (연말 인구 수 - 연초 인구 수)를 연평균 인구수를 나눈 후 1,000을 곱한 값.

자료: 中信建投证券 (2022. 12.)

- 중국의 출산율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인구 비중도 하락 추세를 보임.
- 중국 인구는 2017년 처음으로 14억 명을 넘어섰지만(14억 11만 명) 이후 인구증가세가 본격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함.
- 중국의 출산율은 2017년(1.81명)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일본(1.33명)보다 낮은 1.28명 수준을 기록하였고, 2021년에는 사상 최저인 1.16명을 기록하였음(그림 3 참조).
-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출산율보다 먼저 감소추세에 들어섰으며 2009년 72.9%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그림 4 참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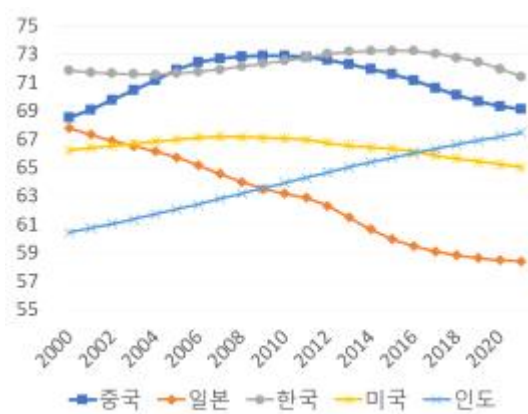
- 중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일본, 미국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2012년부터 한국보다 낮아졌음(그림 4 참조).

그림 3. 주요국의 출산율 변화 추이
(2000~2021년)



주: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생아의 수"를 의미(단위는 명).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4. 주요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 추이
(2000~2021년)



주: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의 인구를 의미하고, 그래프는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비중을 나타냄(단위는 %).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중국은 19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해왔지만 2010년대 정책 기조가 변하기 시작함.2)

- 중국 정부는 1971년부터 산아제한을 권고하기 시작하였고, 1978년 1가구 1자녀 정책을 법제화 하였음.
 - 1950년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1957년 출생아 수는 2,138만 명에 달했으며, 이후 산아제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1971년 국무원은 〈산아제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발표하면서 “한 명은 적지 않고, 두 명은 적당하고, 세 명은 많다”는 구호를 통해 산아제한을 홍보하기 시작하였음.
 - 1978년 제5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최초로 헌법에 산아제한을 명시하였으며, 산아제한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삼기 시작함.
- 이후 중국 정부는 20세기 말 인구를 12억 명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2011년까지 1가구 1자녀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함.
 - 1978년 정부 보고서에는 “한 명이 적당, 두 명은 많다”는 구호가 등장하였지만, 이는 1979년 “한

1) 중국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0년 74.5%에서 2020년 68.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와 근소한 차이는 있지만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참고로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8.9%에서 13.5%로 증가하였음.

2) 「中国计划生育政策的演变历程」, 『河北省健康管理学会』(2022. 2. 22)

명이 적당”으로 변경되며 1가구 1자녀 정책이 적극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함.

- 2007년 국무원이 발표한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산아제한 강화 결정>에 따르면 산아제한으로 인해 4억 명의 인구를 제한할 수 있었으며 이는 중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함.
- 2012년 생산가능인구가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중국 인구정책의 변곡점을 맞기 시작함.
- 2012년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전년대비 345만 명이 감소하면서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감지되기 시작함.
- 2015년 10월 제18기 5중 전회에서는 ‘전면적 2자녀 정책’의 시행을 발표하여 2자녀를 전면 허용
- 2자녀 정책은 2016~2017년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주었지만 이후 출산율은 다시 하락하는 추세임.
- 2021년부터는 1가구 3자녀를 허용함과 동시에 출산장려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사실상 산아제한이 전면 철폐되었음.
- 이와 동시에 자녀 수를 어긴 경우 부과하는 벌금인 ‘사회 유지비’ 부담 의무가 폐지되었음.
- 3자녀 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하락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더 적극적인 출산 장려책이 필요한 상황

■ 중국은 올해 인도에게 세계 1위 인구대국의 지위를 추월당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유엔 통계에 따르면 인도 인구는 14.28억 명으로 2023년 상반기 중에 중국 인구를 추월하여 세계 인구 1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임.³⁾
- 이는 1700년경부터 이어져 온 중국인도 순위의 세계 인구 순위가 처음으로 역전되는 상황
- 향후 인도 인구는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하는 반면, 중국 인구는 이미 감소세로 돌아서서 그 차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그림 5 참조)
- 중국은 향후 노년 부양비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중국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그림 6 참조)
- 저출산으로 인해 유소년 부양비는 낮아지는 반면 노년 부양비는 빠르게 상승하여 2050년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
- 이는 향후 중국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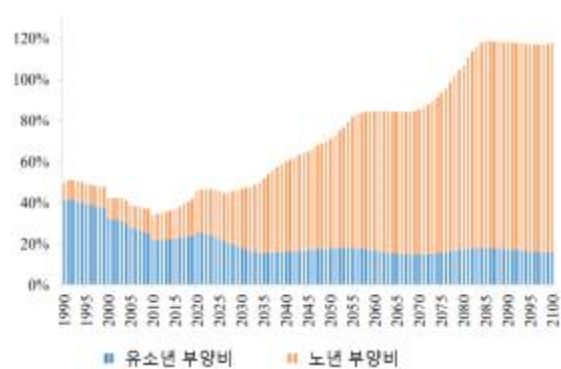
3) 「蔡昉：人口负增长的经济影响与政策调整的机会窗口」, 『中国金融四十人论坛』(2023. 4. 19)

그림 5. 인도와 중국 인구 추이 및 예측치
(1950~2100년)



주: <유엔 인구 전망 22>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인도와 중국의 인구 추이(1950~2022년) 및 예측치(2023~2050년)임
자료: 中国金融四十人论坛(2023. 4. 19)

그림 6. 중국 유소년 및 노년 부양비 추이 및 예측치(1990년~2100년)



주: 본 그래프는 출산율이 1.2명 수준을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작성되었음. 유소년 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대비 유소년(14세 이하) 인구의 비를 의미함.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대비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를 의미함.
자료: 泽平宏观(2023. 2. 7)

2. 중국 저출산·고령화의 원인

■ 중국 저출산·고령화 추세는 서구 선진국이 경험한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중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⁴⁾

- 중국은 고령인구의 절대적인 수가 많고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중국의 65세 이상인 고령인구는 1.91억 명으로 전체 인구의 13.5%를 차지(그림 7 참조)
 - 이는 전세계 고령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며 2057년까지 고령인구는 4.25억 명에 달하여 전체 인구의 32.9~37.6%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2001년 고령화사회 진입에서 2021년 고령사회 진입까지 21년이 소요되었는데,⁵⁾ 이는 프랑스(126년), 영국(46년), 독일(40년)에 비해 매우 짧으며, 일본(24년), 한국(18년)과 비슷한 수준임.
 - 중국은 2032년 전후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데, 이는 고령사회 진입 후 1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역시 독일(36년), 프랑스(28년)에 비해 빠르고, 일본(11년), 한국(7년 예상, 2018~2025년)과 비슷함.

4) 「中国老龄化研究报告」, 『泽平宏观』(2023. 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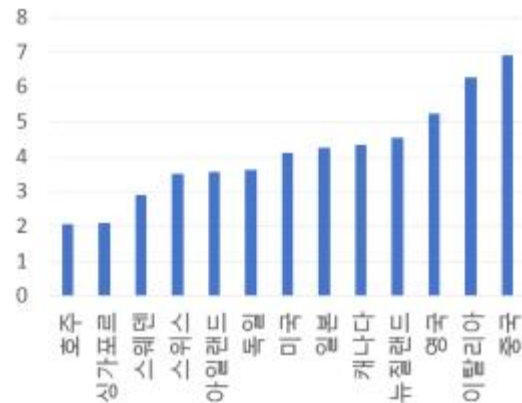
5)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이 7%, 14%, 20% 이상인 경우를 각각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로 정의함.

그림 7. 중국 65세 이상 인구 수 및 비중 추이
(2012~2021년)



자료: 中信建投证券(2022. 12.)

그림 8. 주요국 1인당 GDP 대비 양육비 비교



주: 그래프 값은 만 18세까지의 양육비를 1인당 GDP로 나눈 값
자료: 育娲人口研究 (2023. 5.)

- 중국은 선진국의 경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제 성장에 부담이 가증될 것으로 예상됨.
- 2020년 중국의 80세 이상 인구는 3,660만 명이고, 2050년 1.59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
- 2020년 중국의 장애노인과 독거노인의 수는 이미 각각 4,200만 명, 1.18억 명 수준으로 인구 고령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관련 사회문제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
- 중국의 1인당 GDP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반면, 2020년 기준 고령인구 비율은 13.5%로 중고소득 국가 평균인 10.8%를 이미 추월하여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증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양육비와 열악한 양육환경을 들 수 있음.⁶⁾

-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위와인구연구소(育娲人口研究智库)는 중국의 만 18세까지 양육비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통계치를 발표함.
- 중국의 만 18세까지 양육비는 1인당 GDP의 6.9배로 나타나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그림 8 참조).
- 반면 이탈리아(6.28배), 미국(5.25배) 등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들의 양육비는 1인당 GDP의 3~4배 수준에 불과함.
- 높은 양육비로 인해 이상적으로 원하는 자녀의 수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중국은 양육비 부담으로 직장을 포기하기 어려워지는 등 다자녀를 위한 육아 환경 조성에 어려움을

6) 「中国生育成本报告」, 『育娲人口研究』(2023. 5. 24)

겪고 있음.

- 이와 같은 영향으로 지난 수년간 OECD 데이터에 따르면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가 2명을 넘는 반면, 중국의 경우 2명 이하로 나타남.
- 2017년 기준 중국인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는 1.75명이며, 이는 일본(2.41~2.6명)과 한국(2.45~2.55명) 등 저출산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⁷⁾
- 2022년 1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양진루이 부국장은 청년층이 생각하는 자녀의 수는 2017년(1.76명), 2019년(1.73명), 2021년(1.64명)으로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함.
- 실제 자녀의 수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의 수보다 낮기 때문에 양육비 부담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당분간 출산율 하락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타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영아 위탁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국 여성 생산활동인구(15-64세)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68.6%로 세계 평균인 52.6%보다 높은 수준임.
- 하지만 3세 이하 영유아의 어린이집 보육률은 4%에 불과하며 같은 기간 유럽의 5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상황임.
- 3세 이하 영유아 수가 약 4,000만 명으로 추산되므로 보육률을 50%로 높이기 위해서는 매년 약 4,000억 위안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
- 양육을 대신해줄 보모의 임금도 높은 수준이어서 맞벌이 가정의 출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상하이 등 대도시지역의 보모 임금은 1만 위안에 달해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상승
- 맞벌이 가정의 양육비 절감을 위해 외국인 보모 활용 등 획기적인 대책이 수립이 필요함.
- 홍콩의 경우 2019년 기준 40만 명의 외국인 보모가 있으며 월평균 4,000위안 수준의 비용을 지불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양육이 가능함.
- 또한 중국의 출산휴가 제도는 여성에게만 제공되고 기간이 짧아 출산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은 출산여성에게 98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 때마다 15일의 출산휴가가 추가됨.
- 하지만 여성만 해당하는 출산휴가는 여성 고용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여성의 경제활동 위축과 출산 기피 현상을 더욱 두드러지게 할 수 있음.
- 유럽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출산율 1.8명을 기록한 스웨덴은 부모가 함께 48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각각 최소 90일 이상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혼인 건수 감소와 만혼 추세도 출산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⁸⁾

7) 한국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에서 응답한 평균값의 범위를 나타내며, 일본은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종합사회조사(JGSS)에서 응답한 평균값의 범위를 나타냄.

8) 「房地产最大的灰犀牛，是越来越多的人不想结婚？」, 『明源地产研究院』(2021. 2. 26)

- 혼인 건수는 2021년 763만 명으로 2013년 1,346만 명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
 - 혼인 건수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21년의 수치는 1986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임.
 - 이는 결혼비용 부담과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농촌지역에서는 높은 차이리(彩礼)⁹⁾가 결혼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목되고 있음.¹⁰⁾
 - 차이리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2022년 기준 산시성(35만 위안), 푸젠성(30만), 저장성(25만) 등 순으로 높은 차이리를 요구하고 있음.
 - 서안교통대학 연구팀 조사 결과, 2018년 기준으로 결혼비용은 농촌지역 남성 연평균소득의 1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23년 2월, 국무원이 발표한 <중앙 1호 문건>에서는 농촌현대화와 더불어 지나치게 높은 차이리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해결될지는 미지수임.
 -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젊은 층의 결혼 방해 요소 척결 의지를 보인 것이라 분석
 - 각 지방정부도 지역별로 차이리의 상한선을 정하고 고액의 차이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 차이리는 중국 남녀 성비 불균형으로 남성이 결혼하기 어렵다는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임.
 - 2022년 기준 결혼 적령기 남녀 성비는 1.15대 1 수준이며, 2000년대생의 경우 불균형이 더욱 심화
- 도시지역의 경우 높은 부동산 가격도 혼인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국의 부동산 대출 규모는 2004년 1.6조 위안에서 2018년 25.8조 위안으로 16.1배 증가하였음.
 - 같은 기간 가처분소득 대비 부동산 대출 규모는 16.2%에서 47.6%로 상승하였음.
 -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가처분소득 감소를 경험한 청년층이 점점 결혼을 기피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고학력자가 증가하는 등의 요인으로 혼인연령이 점점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박사 학위자 수는 2015년 32.6만 명에서 2019년 42.4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석사 학위자 수도 같은 기간 158.4만 명에서 243.9만 명으로 증가하여, 고등교육 졸업자 중에 석박사 학위자 비율은 10.8%에서 14%로 상승하였음.
 -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기간은 1982년 5.3년에서 2017년 9.6년으로 상승하였고 이러한 높은 학력 수준은 초혼 연령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 여성 평균 초혼연령은 1990년 22세에서 2016년 25.4세로 늦춰졌고, 같은 기간 남성 평균 초혼연령은 24.1세에서 27.2세로 늦춰졌음.
 - 초혼연령의 상승은 가임기간의 감소로 이어져 출산율을 낮추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음.

3. 향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

9) 차이리(彩礼)는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 측에 주는 지참금을 의미함.

10) 『新研究剖析“天价彩礼”：一场农村男性婚姻市场的恶性竞争』, 『人民日报数字传播』(2023. 2. 14)

■ 중국사회과학원 수석경제학자 차이팡은 인구감소의 경제적 효과를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분석하였음.¹¹⁾

- [공급 측면①] 중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따라 향후 자본집약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노동의 중요성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음.
 - 중국 노동력의 감소는 자본집약도의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자본의 한계생산성 체감으로 인해 자본수익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음.
 - 그동안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으로 인해 낮은 자본집약도로 높은 자본수익률을 보였지만, 향후 상반된 기조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실질이자율의 하락이 예상됨.¹²⁾
 - 낮은 수익률로 인해 자본투자의 증가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을 일정 정도 이상 대체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산업별로 자본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자본수익률이 높은 곳에 자본을 투입하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또한 기술진보는 노동 대체뿐만 아니라 노동과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노동력도 여전히 주요한 생산요소임.
- [공급 측면②] 중국 노동력의 감소는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로 이어져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동안 중국은 생산성이 낮은 산업에서 높은 산업으로 노동력의 이동을 통해 총요소 생산성을 증가시켜 왔는데 농민공조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재분배가 나타나지 못해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함.
 - 지난 10년간 공급측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에 도달했지만 향후 노동력부족의 심화는 생산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소비 측면①] 인구감소는 여러 경로를 통해 소비를 감소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둔화는 소득증가율을 감소시켜 전체 소비수준의 하락을 야기함.
 - 중국의 노년층은 청년층에 비해 소득이 적고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 여력도 낮은 수준이므로 노년층의 확대는 전체 소비수준을 하락시킬 것으로 예상
 - 노인부양비용의 증가로 인한 청년층의 세금 부담 심화는 이들의 가처분소득을 하락시켜 소비수준도 하락함.
- [소비 측면②] 인구 문제로 인한 소비축소 문제는 소득재분배를 통해 일부 상쇄가 가능함.¹³⁾
 - 저소득층은 중고소득층에 비해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생활 보조는 전체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음.
 -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소비감소를 소득재분배를 통한 소비 증가로 일정 정도 상쇄할 수 있음.

11) 「人口副增长时代 中国经济增长的挑战与机遇」, 『中信出版集团』(2023. 3)

12) Carvalho, Ferrero and Nechio(2016)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로 인한 기대수명의 증가는 저축률을 높이고, 인구 증가율 하락은 1인당 자본을 늘려 실질금리를 하락시킨다. 하지만 고령자의 낮은 저축성향은 실질금리를 상승시키는데, 전자의 효과가 후자보다 우세하여 인구 고령화는 실질금리를 하락시키는 효과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蔡昉：人口负增长时代，如何应对？」, 『水木财经观察』(2023. 3. 27)

- [소비 측면③] 저출산·고령화 시기에 맞는 관련 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¹⁴⁾
 -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관련 실버산업과 의료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젊은 층의 만혼과 미혼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면서 이들에 맞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 제조업에서 인력의 숙련도가 중요해지면서 직업교육 관련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

■ 중국 정부는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양육비 부담 경감에 집중하고 있음.¹⁵⁾

- 2021년 7월, 국무원은 〈육아정책 개선과 장기 인구발전 촉진을 위한 결정〉에서 출산, 양육,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 절감 대책에 대해서 언급함.
- 2021년 8월, 전인대는 〈인구와 산아제한〉 법안의 수정안에서 “국가는 가정의 출산, 양육, 교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여 부동산, 취업 등의 문제에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추가함.
- 2023년 3월, 〈정부업무보고〉는 3자녀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3세 이하 자녀의 양육비용을 개인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육아서비스 제공 범위를 넓혀서 가정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함.
- 각 지방정부에서도 양육비 경감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인구 지키기에 노력하고 있음.
 - 2021년 7월, 쓰촨성 판즈화(攀枝花)시는 둘째 혹은 셋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매월 5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함.
 - 2021년 9월, 간쑤성 린저(臨澤)현은 둘째 자녀에게 매년 5,000위안을, 셋째 자녀에게 매년 10,000위안의 보조금을 만 3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며, 또한 둘째 자녀에게는 연 1,000위안, 셋째 자녀에게는 연 2,000위안의 유치원 학비를 지급하기로 함.
 - 2021년 10월, 신장위구르자치구 스허쯔(石河子)시도 둘째와 셋째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해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 각각 매월 500위안과 1,000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함.
 - 2021년 12월, 길림성 정부는 〈출산을 제고와 장기 인구발전을 위한 방안〉에서 유치원 보급 확대, 자녀보조금 지급, 결혼 시 최대 20만 위안의 대출 등 결혼과 양육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발표
-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많은 예산투입을 위해 중앙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
 - OECD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2017년 기준 아동 부문 현금보조가 GDP 대비 1~2%로 유럽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일본과 한국은 GDP 대비 각각 0.65%, 0.15%에 불과한 수준임.
 - 위와인구연구소(育娲人口研究智库)는 중국의 양육비가 선진국 수준의 부담으로 느껴지기 위해선 GDP의 3~5%에 해당하는 정부예산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 이는 지방정부의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기에 저출산 정책에 있어서는 중앙정부가 더 주

14) 「【中泰策略】徐驰：人口负增长时代，资本市场的投资机会在哪里？」, 『中泰证券研究』(2023. 3. 13)

15) 「中国生育成本报告」, 『育娲人口研究』(2023. 5. 24)

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함.

■ 중국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겪게 될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7월, 국무원은 <14차 5개년 계획기간 신형도시화 실시 방안>을 발표하여 도시화 촉진 계획을 구체화함.¹⁶⁾
 - 2025년까지 도시상주인구와 호적에 등록된 도시인구 모두를 늘리고, 농촌인구의 도시 이주를 장려하겠다는 계획을 포함함.
 - 인구 300만 명 이하 도시의 호구제도를 철폐하고 외지 인구도 동등한 공공서비스를 받도록 개정을 추진
 - 인구 5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호구 획득 점수 제도를 단순화하여 호구를 쉽게 얻도록 체계를 개편하려 함.
 - 또한 부동산 가격안정과 도시 재개발을 통해 도시 생활시설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임.
- 중국의 전문가들은 도시화를 제고를 통해서 노동력 부족과 소비수준 하락 모두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함.¹⁷⁾
 - 2022년 중국의 도시화율은 65% 수준으로 한국(81%), 일본(90%)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아직도 상승 여지가 충분하며, 따라서 도시화를 통해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을 촉진하여 노동력 확보가 충분히 가능함.
 - 또한 2021년 기준 도시상주인구 비율은 65%인데 비해, 호적에 등록된 도시인구 비율은 47%에 불과하여 도시의 공공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도시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 차이를 제도개선을 통해 좁힌다면 이들의 소비수준은 28%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¹⁸⁾
-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실시하고 있음.¹⁹⁾
 - 2022년 12월, 국무원은 <내수시장 확대전략 2022~2035년>을 발표하면서 근로자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하였음.
 - 현재 근로자 정년은 남성 60세, 여성 간부급 55세, 여성 직원급 50세로 70년대 말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 복단대학 런야오키 교수는 국민들의 건강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정년 연장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를 통해 노인층 소득 및 소비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함.

16) 「“十四五”新型城镇化方案：明显提高户籍人口城镇化率」, 『界面新闻』(2022. 7. 12)

17) 「蔡昉：直面人口负增长，中国应如何应对？」, 『上观』(2023. 5. 23)

18) 「观察 | 王一鸣：应辩证看待人口负增长带来的挑战」, 『北京日报』(2023. 5. 8)

19) 「中央最新发文部署，再提实施渐进式延迟退休」, 『绍兴网』(2022. 12. 15)

4. 평가 및 전망

■ 중국은 공식적으로 절대 인구 수보다 인구구성이나 인적자원이 중요하며 인구 감소를 충분히 대응가능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리커창 전 총리는 2023년 3월 재직 당시 중국의 인구 감소에 대해 “인구보너스는 사라지고 있지만 인재보너스는 커지고 있다”라는 발언으로 중국의 발전 여력이 충분하다는 인식을 보였음.²⁰⁾
- 2023년 4월,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도 인구수보다 질적 수준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인재의 질적 향상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²¹⁾
- 중국 노동가능인구의 평균 교육기간은 10.9년에 달하여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이 충분함을 밝혔음.
- 또한 중국 정부는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3자녀 정책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중국의 대응 정책에 자신감을 보였음.

■ 중국의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주문하면서도 중국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일부 문제를 극복 가능할 것이라 긍정적으로 판단함.

-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왕이밍 부이사장은 인구 문제의 위기 속에서도 성장의 기회는 여전하다고 강조함.²²⁾
- 앞으로 노인인구 비중은 확대되겠지만, 이는 중국의 의료환경 개선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향후 노동력은 줄어들어도 학력 상승으로 인적자본은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고품질 발전을 지속할 것임.
- 인구감소로 소비 규모는 줄겠지만, 소득수준 향상으로 인해 소비의 질이 늘어 전체 소비시장의 성장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함.
- 난카이대학 위안신 교수는 중국은 당분간 여전히 인구 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겠지만 향후 30년이 문제해결에 중요하다고 주장함.²³⁾
- 유엔에 따르면 2050년 중국 인구는 12~14억 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비관적인 경우에도 인구 대국의 지위는 지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20) 「李强总理：我们的人口红利并没有消失，人才红利正在逐步形成」, 『澎湃新闻』(2023. 3. 13)

21) 「外交部：人口质量更重要」, 『腾讯网』(2023. 4. 19)

22) 「观察 | 王一鸣：应辩证看待人口负增长带来的挑战」, 『北京日报』(2023. 5. 8)

23) 「「专访」应对人口负增长，低龄老龄化带来改革“窗口期”」, 『界面新闻』(2023. 2. 27)

- 다만 중국은 이제 막 인구감소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아직 충격이 크지 않지만 향후 문제가 확대 될 것에 대비해 향후 30년간 적극적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
- 루지에화 북경대 교수는 “중국식 방안”을 만들어서 인구 문제에 대응할 것을 제안함.²⁴⁾
- 양육, 구직, 노인복지 등 인구와 관련된 주요 문제에 집중하고, 기존 선진국의 인구문제 대응책을 참고하여 중국에 맞는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할 것을 촉구함.
- 인구 데이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인구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더 효율적으로 대응책을 세울 것을 제안함.

■ 중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로 넓은 시각에서 해결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국제적으로 중요 이슈 중 하나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찍이 인구 문제를 겪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경제구조가 비슷한 한국 및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인구 문제는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국제정세 속에서 중국의 국가경쟁력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이슈 중 하나임. KIEP

24) 「人口高质量发展迫切需要完善新时代人口发展战略」, 『金台资讯』(2023. 5. 25)

[참고자료]

- 「“十四五”新型城镇化方案：明显提高户籍人口城镇化率」. 2022. 『界面新闻』(7. 12)
- 「「专访」应对人口负增长，低龄老龄化带来改革“窗口期”」. 2023. 『界面新闻』(2. 27)
- 「【中泰策略】徐驰：人口负增长时代，资本市场的投资机会在哪里？」. 2023. 『中泰证券研究』(3. 13)
- 「蔡昉：人口负增长的经济影响与政策调整的机会窗口」. 2023. 『中国金融四十人论坛』(4. 19)
- 「蔡昉：人口负增长时代，如何应对？」. 2023. 『水木财经观察』(3. 27)
- 「蔡昉：直面人口负增长，中国应如何应对？」. 2023. 『上观』(5. 23)
- 「房地产最大的灰犀牛，是越来越多的人不想结婚？」. 2021. 『明源地产研究院』(2. 26)
- 「观察 | 王一鸣：应辩证看待人口负增长带来的挑战」. 2023. 『北京日报』(5. 8)
- 「李强总理：我们的人口红利并没有消失，人才红利正在逐步形成」. 2023. 『澎湃新闻』(3. 13)
- 「人口副增长时代 中国经济增长的挑战与机遇」. 2023. 3. 『中信出版集团』
- 「人口高质量发展迫切需要完善新时代人口发展战略」. 2023. 『金台资讯』(5. 25)
- 「外交部：人口质量更重要」. 2023. 『腾讯网』(4. 19)
- 「新研究剖析“天价彩礼”：一场农村男性婚姻市场的恶性竞争」. 2023. 『人民日报数字传播』(2. 14)
- 「中国计划生育政策的演变历程」. 2022. 『河北省健康管理学会』(2. 22)
- 「中国老龄化研究报告」. 2023. 『泽平宏观』(2. 7)
- 「中国生育成本报告」. 2023. 『育娲人口研究』(5. 24)
- 「中央最新发文部署，再提实施渐进式延迟退休」. 2022. 『绍兴网』(12. 15)

자료 정리: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무역학과 박사과정 김동현
(brenze1@naver.com)